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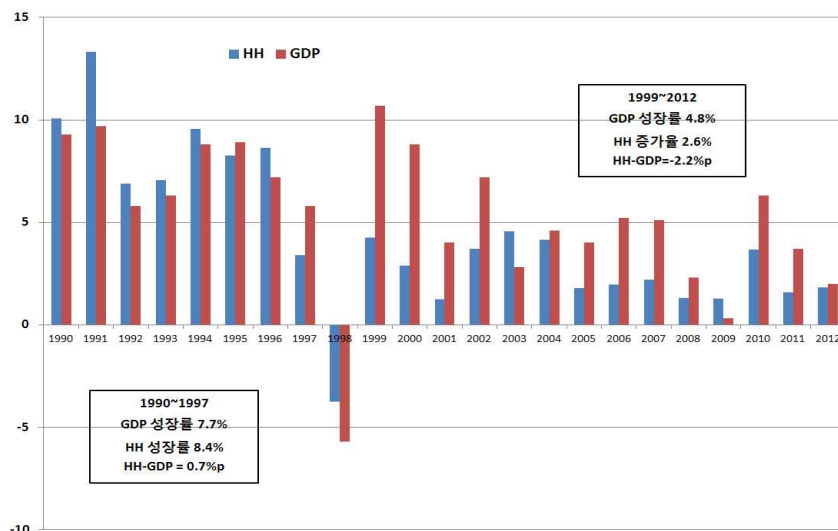
##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 : 극단적 현실

2013.11.18 | 여경훈\_ 새사연 연구원 | noreco@korea.ac.kr

상위10%의 실질소득은 1990년 대비 2012년 88% 증가하였다. 반면 하위10%의 실질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고작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위10%는 외환위기로 1998년에만 31%,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실질소득은 15% 감소하였다. 최근 3년 하위10%의 실질소득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2012년 하위10%의 실질소득은 여전히 200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1] 가계와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율(1990~2012)



\*자료: 한국은행, HH(가계 실질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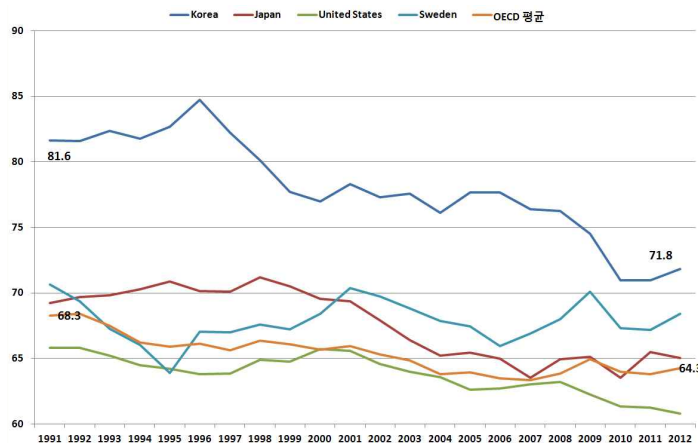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대략 두 가지 성장과 분배에 관한 함의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과도한 분배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거시경제적 통찰 아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정책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먼저, 노동소득, 가계소득, 상위1% 소득 등으로 범주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그림2] OECD 주요 선진국의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1991~2012)



\*자료: AMECO

과거 수십 년 동안 노동소득 분배율의 안정성은 경제성장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간주되었다.<sup>2)</sup> 20세기 전반기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

1) 이 글에서는 소득불평등 실태를 다루고, 다음 글에서 원인과 대책을 다루도록 한다.

2) Kaldor(1957), A model of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67, 59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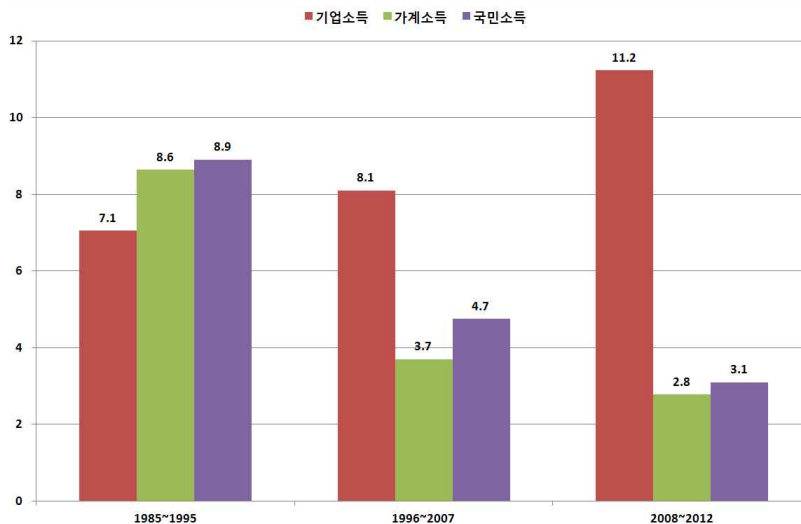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 간 분배는 장기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는 연구 대상에서 거의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보편적 통념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OECD에 따르면, 1990~2009년 기간, 30개 선진국 중 26개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다. OECD 30개 국가의 중간값은 1990년 66.1%에서 2009년에는 61.7%로 4.4%p 떨어졌다.<sup>3)</sup> 위 [그림2]에 따르면, OECD 26개국 평균은 1991년 68.3%에서 2012년 64.3%로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6개국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로, 1991년 81.6%에서 2012년 71.8%로 거의 10%p 떨어졌다. OECD 평균 4%p 하락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통상 노동소득분배율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같다고 가정하여, 조정노동소득분배율(Adjusted wage share)을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선진국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저평가 되고, 개발도상국은 이와 반대이므로 고평가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소득상승률이 노동자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소득 분배율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2.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그림3] 가계, 기업,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1985~2012)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의 실질순처분가능소득(RNDI)

3) OECD(2012),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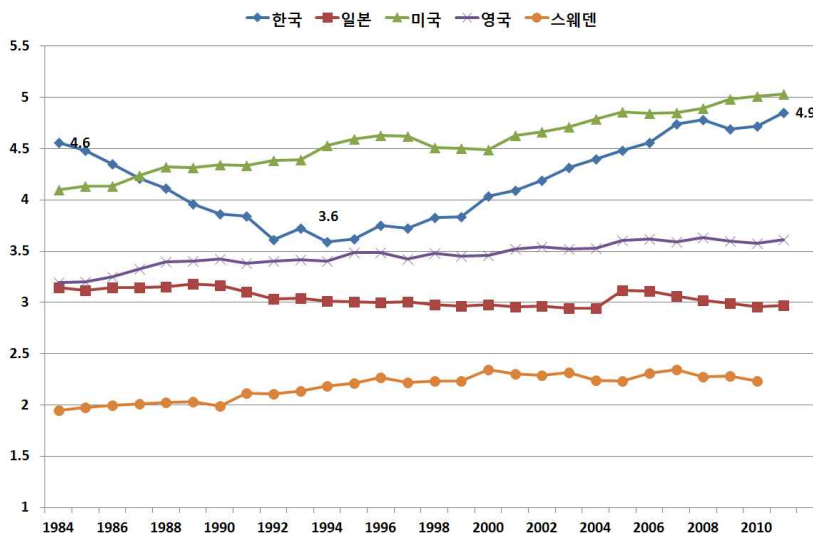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9% 성장했으며, 가계소득은 8.6%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가계와 기업 간 소득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민소득 성장률과 비교한 양 부문 성장률 차이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 [그림3]에서 보듯,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외환 위기 이전(1985~95년) 평균 8.9%에서 위기 이후 4.7%, MB 집권 이후에는 3.1%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위기 이전 7.1%에서 위기 이후 8.1%, MB 집권 이후에는 11.2% 증가하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율이 5.8%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4.1%p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최근의 증가율(2.8%)은 고도성장기(8.6%)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율이 하락한 것도 모자라, 가계와 기업 간 소득양극화는 고스란히 가계의 소득증가율 정체로 귀결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75.8%에서 2010년 63%로 12.8%p 떨어졌고, 반면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13.5%로 7.8%p 증가하게 되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경제의 파이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악화는 전적으로 가계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속되고 있는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이른바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3. 개인 간 소득격차 확대

[그림4] 주요 선진국의 P90/P10<sup>4)</sup> 추이(198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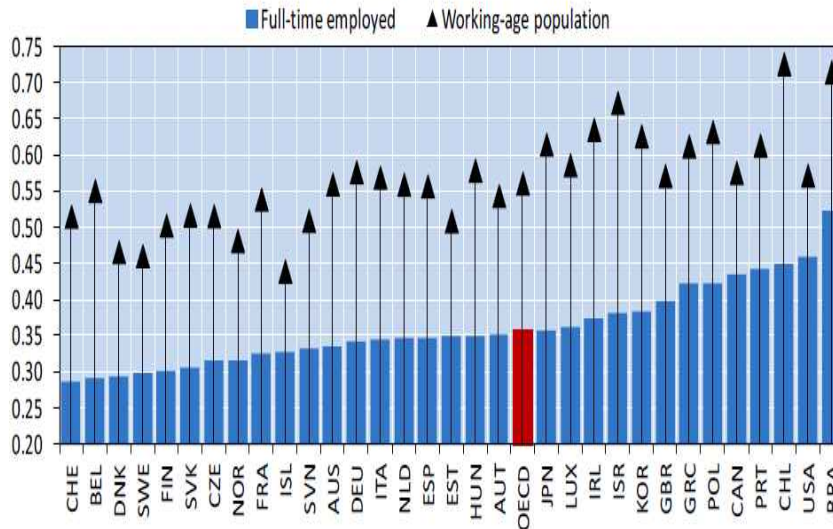
\*자료: OECD Earnings Data Bas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위 그림은 주요 선진국의 전일제 노동자(full-time labor) P90/P10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임금격차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P90/P10 비율은 1984년 4.6배에서 1994년 3.6배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그 추세는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듯이 그 결정적 계기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4.9배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P90/P10 비율은 1990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 또한 1990년 21.3%에서 2011년 25.1%로 3.8%p 증가하였다. 이 역시 미국과 선두를 다툰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OECD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2008년)



\*자료: OECD(2012)<sup>5)</sup>

위 그림은 OECD 32개 국가들의 전일제 노동자와 생산인구 각각에 대한 지니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그러나 위 그림에 따르면, 전일제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61로 OECD 평균(0.55)보다 높다. 이스라엘(0.65), 폴란드(0.64), 그리스(0.63), 아일랜드(0.62), 일본(0.62) 순으로 지니계수가 높고, 한국은 OECD 여섯 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0.38로 OECD 평균(0.35)보다 높은 아홉 번째에 해당한다.

4) 소득상위10%의 경계값(P90)과 소득하위10%의 경계값(P10) 비율로 통상적인 10분위배율(소득상위10%의 평균값과 소득하위10%의 평균값 비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5) OECD(2012), 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표1] 주요 소득 범주에 따른 소득불평등 지표(2008)

| 구분         | 개인             |            | 가계<br>노동소득     | 가계시장소득         |                | 가계가처분소득        |                |          |
|------------|----------------|------------|----------------|----------------|----------------|----------------|----------------|----------|
|            | Gini(생<br>산인구) | 10분위<br>배율 | Gini(생산<br>인구) | Gini(생산<br>인구) | Gini(전체<br>인구) | Gini(생산<br>인구) | Gini(전체<br>인구) | 빈곤률      |
| 한국         | 0.61           | 4.78       | 0.35           | 0.32           | 0.34           | 0.30           | 0.32           | 15.0     |
| 순위         | <b>6</b>       | <b>3</b>   | <b>15</b>      | <b>34</b>      | <b>34</b>      | <b>19</b>      | <b>16</b>      | <b>7</b> |
| OECD<br>평균 | 0.55           | 3.33       | 0.35           | 0.41           | 0.46           | 0.31           | 0.31           | 11.2     |

\*인용: OECD(2012), 순위가 낮을수록 불평등함

특이한 것은 개인 노동소득의 지니계수(0.61)는 OECD 평균(0.55)보다 높은 반면, 가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OECD 34개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는 점이다.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로 OECD 평균 0.46보다 1.2p만큼 낮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의 데이터 차이에서 주로 비롯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노동 연구원의 노동소득패널조사(2009)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김낙년(2012)의 자료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는 통계청 가계조사와 국세청 소득세, 그리고 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에서 파악한 개인소득을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을 조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2]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의 개인소득 비교(단위: 조 원)

| 구분   | 한국은행<br>소득계정(1) | 국세청<br>소득세(2) | 통계청<br>가구조사(3) | (3)/(1)    | (3)/(2)    |
|------|-----------------|---------------|----------------|------------|------------|
| 노동소득 | 459.2           | 447.3         | 386.8          | 84.2       | 86.5       |
| 사업소득 | 109.6           | 81.4          | 132.6          | 121.0      | 162.9      |
| 이자   | <b>35.8</b>     | <b>35.3</b>   | <b>2.1</b>     | <b>6.0</b> | <b>5.9</b> |
| 배당   | <b>14.4</b>     | <b>13.3</b>   | <b>0.3</b>     | <b>2.2</b> | <b>2.3</b> |
| 합계   | 621.4           | 577.4         | 522.2          | 84.0       | 90.4       |

\*인용: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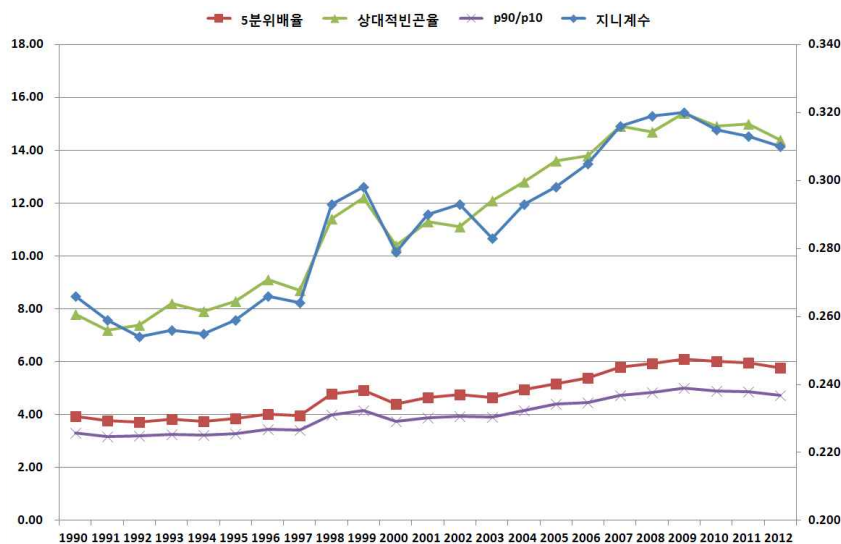


위의 [표2]에 따르면 통계청 가구조사의 개인소득은 국민계정의 84%, 소득세 자료의 90.4%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자와 배당 소득은 각각 국민계정의 6%, 2.2%만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통계청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은 거의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sup>6)</sup> 한국은행 소득계정에 따르면 2010년 재산소득은 52.7조로 전체소득의 8.5%를 차지한다. 반면 통계청 가구조사의 재산소득은 2.7조로 전체의 0.5%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2년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은 전체 경상소득의 0.5%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상위 가구의 응답률이 매우 낮고, 이들이 소득을 과소 보고한다는 일반적 인식과도 부합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국민계정보다 21%, 소득세 자료보다는 63%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득세 자료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과소 보고되고, 통계청 가구조사에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통계청 가구조사는 상하위 양 극단 가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과소 보고되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록 가구조사가 소득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시계열 지표는 불평등 추세를 확인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4. 가구 간 소득격차 확대

[그림6] 가구 시장소득의 주요 불평등 지표 추이(1990~2012)



\*자료: 통계청

6) 가계의 이자부담도 통계청 가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가구당 이자부담은 월평균 8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계정의 소득계정의 개인 이자부담 총액은 2012년 45.3조로 가구수(1795만)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252만원(월 21만원)으로 통계청 가구조사보다 2.6배 높다. 한마디로 통계청 가구조사의 재산소득 수치들은 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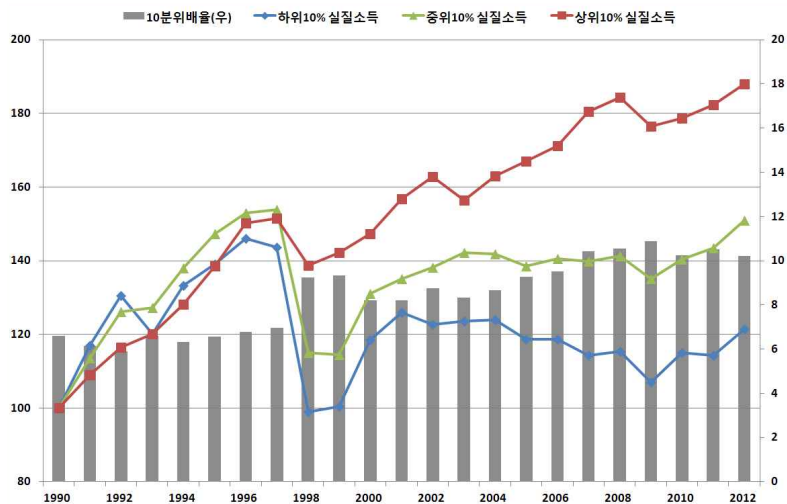


위 [그림6]은 1990년 이후 도시 2인 이상 가구(균등화 가구) 시장소득의 각종 소득불평등 지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1994년 0.255로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0.32로 정점을 찍었다. 1994~2009년 기간 지니계수는 25.5%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지니계수의 추이를 그대로 추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지표의 상승률은 더 급격하여 1991년 7.2%에서 2009년 15.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양호하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OECD에서 6번째로 높다. 마지막으로 P90/P10 비율은 1991년 3.16배에서 2009년 5.02배로 58.9% 증가하였다. 또한 5분위배율은 1992년 3.71배에서 2009년 6.11배로 64.7% 증가하였다. 분배 지표로만 보면,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P90/P10 비율, 그리고 지니계수 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악화되었다.

아래 그림은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의 10분위배율과 1990년(=100)과 비교한 상하위 가구의 실질소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7] 상위, 하위, 중위 가구의 실질소득 추세(1990=100)



\*자료: 통계청

10분위배율은 1992년 5.88배에서 2009년 10.88로 85% 상승하였다. 상위10%의 실질소득은 다른 계층과 달리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상위10% 실질소득은 1990년 대비 2012년 88% 증가하였다. 반면 하위10%의 실질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고작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하위10%의 실질소득은 46% 증가했지만, 외환위기로 1998년에만 31%의 실질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또





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실질소득은 15% 감소하였다. 최근 3년 하위10%의 실질소득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2012년 하위10%의 실질소득은 여전히 200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위가구는 1990년대 초중반 실질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으로 실질소득은 1990~97년 53.8%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1998년에 실질소득이 25% 감소한 이후 2000년대에도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3년 중위가구의 실질소득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2012년 여전히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분위배율도 지니계수의 추이를 따르고 있는데, 90년대 초반 지니계수와 10분위배율이 하락한 것은 중·하위 가구의 소득이 상위 가구보다 높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하위10% 가구소득의 하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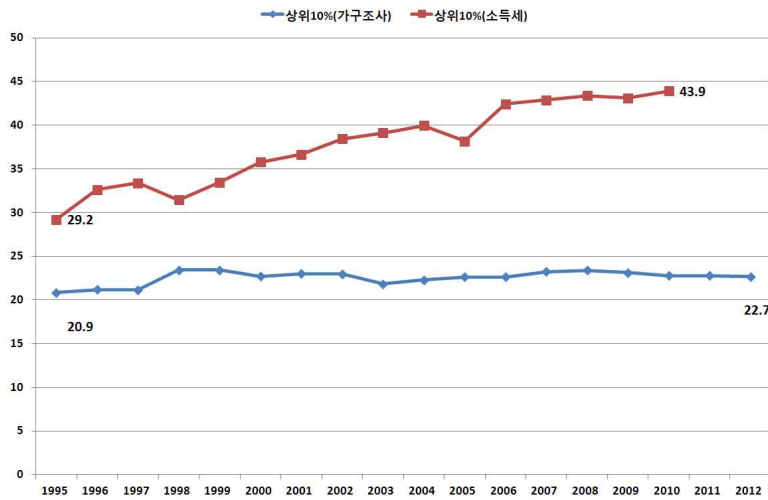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위10% 소득비중과 가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상위10% 소득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김낙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10%의 소득비중은 1995년 29.2%에서 2010년 43.9%로 대폭(14.7%p) 증가하였다. 반면 통계청 가구조사에서 상위10% 소득비중은 1995년 20.9%에서 2012년 22.7%로 불과 1.8%p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1년 23%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 10여 년 동안 오히려 상위 10% 소득비중은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구조사에서 상위10% 소득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 경제위기에 금융자산과 이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상위소득의 비중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산소득을 사실상 누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소득불평등은 주로 상·하위 양극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위10%, 상위1%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득불평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닌다. 요컨대, 1990년대 초반 소득불평등 개선은 중·하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상위 가구보다 높았기 때문이고,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악화와 최근 개선은 주로 하위10% 가구소득의 변동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가구조사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개인 임금 또는 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불평등 지표와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상위10% 가구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불평등 지표와 달리,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7) 2009년 이후 통계청 가구조사를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하위 10%의 소득증가율(13.5%)이 중위가구(11.8%)나 상위10%(6.5%)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고용 창출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통계청 가구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패널조사나 소득세조사의 추이를 확인한 후에야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8] 가구조사와 소득세조사의 상위10% 소득비중(1990~2012)



\*자료: 통계청, 김낙년(2012)

따라서 우리나라 가구조사의 지니계수가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는 소득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통계청 가구조사의 불평등 지표를 기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자칫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sup>8)</sup> 무엇보다 최근 소득불평등이 상위소득에서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상위1% 소득비중의 국제적, 시계열적 비교가 필요하다.

### 5. 상위1% 소득비중 증가

아래 그림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주요 선진국의 지난 100년 동안의 상위1% 소득 비중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상위1% 소득비중은 크게 하락한 다음, 1950~7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자본주의 황금기는 선진국에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열매를 함께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위1% 소득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0년 8%에서 금융위기 직전 18.3%까지 상승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작년 19.3%로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sup>9)</sup> 스웨덴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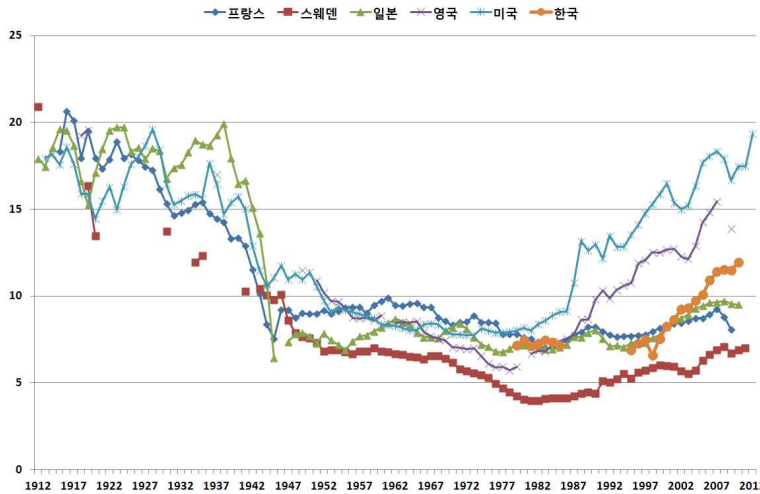
8) 예를 들어 OECD(2011, Divided we stand)는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모든 OECD 국가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정책 대안으로 고용증진과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상위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9) 경제위기는 상위1% 소득비중이나 자본소득 분배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윤과 재산소득의 변동성이 노동소득보다 크기 때문이다.



도 1980년대 중반부터 상위1% 소득비중이 상승했지만, 미국처럼 상승률이 가파른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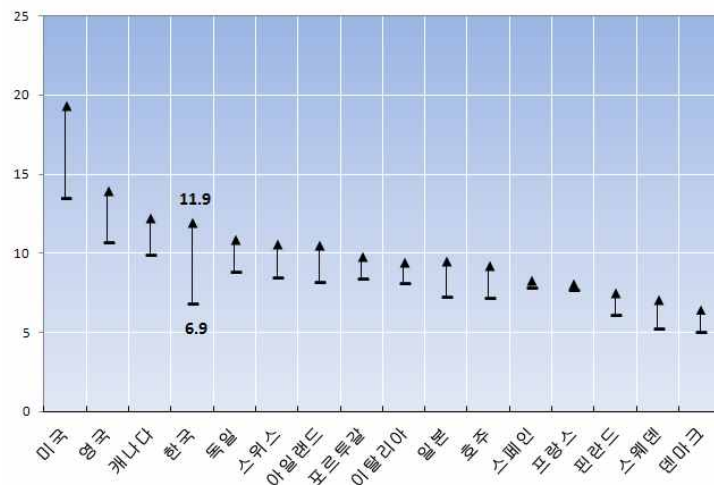
[그림9] 주요 선진국의 상위1% 소득비중 추세(1912~2010)



\*자료: World Income Data Base, 김낙년(2012)

우리나라는 1995년 6.9%에서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6.6%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스웨덴보다는 높지만, 프랑스나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심각하였다. 2010년 11.9%로 현재 영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10] 주요 OECD 국가의 상위1% 소득비중 변화(1995→2010)



\*자료: 위의 글.



위 [그림10]은 1995~2010년, OECD 주요 선진국의 상위1% 소득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미국으로 13.5%에서 19.3%(2012년)로 5.8%p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로, 6.9%에서 11.9%로 5%p 상승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영미권 국가가 수치와 상승폭 모두 컸고, 독일 등 유럽 국가가 그 다음을 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금융위기로 하락하여 거의 수치에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애초 5~6%로 수치도 낮았고, 상승폭도 1%p 정도로 그치고 있다.

상위1% 소득비중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 다음으로 높고 상승 추세는 그 어떤 나라보다 급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통계청 가구조사를 기초로 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는 지니계수 수치는,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한낱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15일 현재

| 아젠다  | 발간일   | 제목                              | 작성자 |
|------|-------|---------------------------------|-----|
| 이슈진단 | 2/7   |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 김병권 |
| 이슈진단 | 2/15  |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 김수현 |
| 이슈진단 | 2/22  |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다                | 최정은 |
| 이슈진단 | 3/9   |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 김병권 |
| 이슈진단 | 3/11  |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 여경훈 |
| 이슈진단 | 3/11  |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 김병권 |
| 이슈진단 | 3/13  |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 김수현 |
| 이슈진단 | 3/18  |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 김병권 |
| 이슈진단 | 3/23  |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 김병권 |
| 이슈진단 | 4/2   |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 최정은 |
| 이슈진단 | 4/3   |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 김병권 |
| 이슈진단 | 4/11  |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 김병권 |
| 이슈진단 | 4/24  |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 최정은 |
| 이슈진단 | 5/2   |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 여경훈 |
| 이슈진단 | 5/9   |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 김수현 |
| 이슈진단 | 6/7   |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 이은경 |
| 이슈진단 | 6/12  |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 김병권 |
| 이슈진단 | 6/17  |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 여경훈 |
| 이슈진단 | 6/27  |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 김수현 |
| 이슈진단 | 8/13  |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 여경훈 |
| 이슈진단 | 10/8  |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 여경훈 |
| 이슈진단 | 10/11 | 2014년 정부예산안 평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부문  | 최정은 |
| 이슈진단 | 10/14 |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 김수현 |
| 이슈진단 | 10/24 |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 여경훈 |
| 이슈진단 | 10/31 |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 개혁의 필요성           | 김병권 |
| 이슈진단 | 11/04 |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 정태인 |
| 이슈진단 | 11/05 | 유아 공교육, 사교육에 잠식되다               | 최정은 |
| 이슈진단 | 11/07 |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문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 김수현 |
| 이슈진단 | 11/11 | 대한민국 협동조합 현 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 분석 | 김병권 |
| 이슈진단 | 11/15 |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과 부동산 정책 방향          | 김병권 |
| 이슈진단 | 11/18 |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 : 극단적 현실           | 여경훈 |